

# 현안과 과제

■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설문조사

# 목 차

---

## ■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	i
1. 개요 .....	1
2.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 .....	2
3. 시사점 .....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백 다 미 선 임 연 구 원 (2072-6239, dm100@hri.co.kr)

##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개요

새 정권 출범으로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 리스크는 소멸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다.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를 통해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 탄핵 이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국민인식

첫째, (탄핵의 비용)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 및 국정 마비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를 우려했다. 탄핵의 정치·사회적 비용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0%가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이라고 응답했으며, 탄핵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국정마비로 정책 추진력 약화’에 대한 응답률이 37.1%로 가장 높았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은 1순위가 국민 통합, 2순위가 양극화 해소였다. 총 8개 보기를 통해 질문한 결과, 국민통합이 29.9%, 양극화해소가 21.7%로 가장 높았으며 3순위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정치개혁’ 또는 ‘저성장 탈피’라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경제정책 우선순위) 경제 정책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1~2순위로 응답했다.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뒤야할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이 39.0%, 재벌 개혁이 21.1%로 가장 높으며,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일자리창출과 재벌개혁을 1~2순위로 선택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20대는 일자리 창출, 3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신성장동력 마련, 여성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평균 대비 높았다.

넷째, (일자리 정책)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보다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새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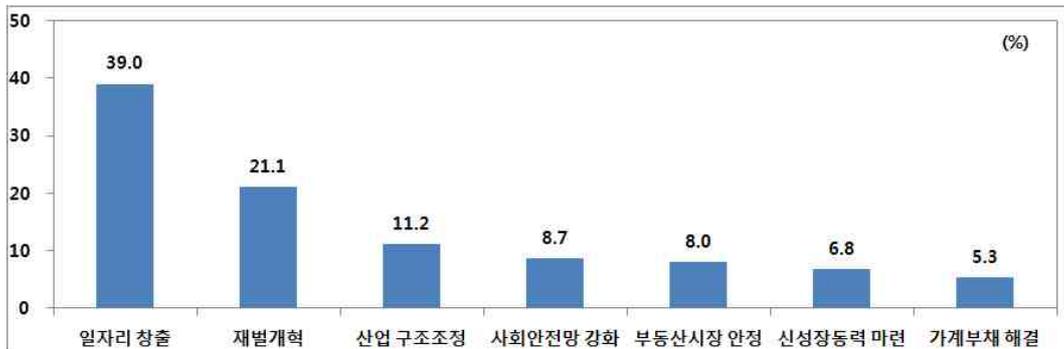
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에 대한 응답이 42.9%로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19.2%, '공공기관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는 22.2%에 그쳤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정책)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응답률이 41.8%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 및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뒤따르는 부작용 중 하나인 고용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 정책) 응답자 전반적으로는 육아 복지 및 공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직업별로 보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주거복지', 30대는 '육아복지', 40~50대는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별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은 '교육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은 '주거복지', 자영업자는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직업별로 차이가 났다.

일곱째, (정치 분야 정책) 응답자들이 새 정부의 정치 분야에서 바라는 1순위 정책은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이다. 국회의 책임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응답률은 약 42.9%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 경제 정책 우선 순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시사점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다는 민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개요

- (연구배경) 새 정권 출범으로 2016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 리스크는 소멸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에 직면
  -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
    - 탄핵 인용 및 차기 정권의 출범으로 2016년 연말 이후 시작된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
    -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는 투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의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사라짐<sup>1)</sup>
    - 이에 따라 소비자동향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이 탄핵 인용 이후 상승세를 지속
  - 그러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청년 실업,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이 남아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
    - 경제 분야에서는 역동성 약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내수 장기 부진,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의 문제가 산적
    - 사회 분야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문제, 양극화 심화, 사회 갈등 등이 지적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 추가 기준금리 상승 속도, 주요국 정치적 불확실성, 브렉시트,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이 존재
- (연구목적) 설문조사를 통해 새정부에 바라는 국민 인식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
  - 설문조사 기간은 2017년 5월 30일~6월 12일까지며, 표본수는 총 1,004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임
    - 응답자 특성은 <별첨> 참조

1) 현대경제연구원,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STORM', 경제주평 17-10호, 2017.03.10 참조.

## 2. 탄핵 이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한 국민인식

① (탄핵의 비용)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 및 국정 마비에 따른 정책 추진력 약화를 우려

- (정치·사회적 비용) 설문 응답자들은 탄핵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으로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을 가장 우려

· “탄핵사태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치·사법부 등 사회적 신뢰 훼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0%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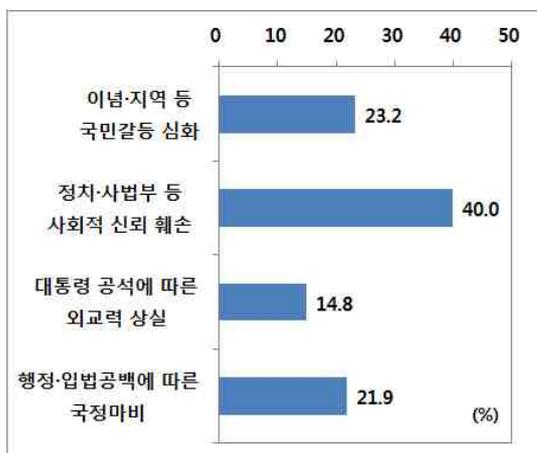
· 보수층은 '이념·지역 등 국민갈등 심화' 응답 비중이 31.7%로 가장 높았으나,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층에서 사회적 신뢰 훼손을 가장 우려

- (경제적 비용) 탄핵 사태에 따른 경제적비용으로는 '국정마비로 정책 추진력 약화'를 가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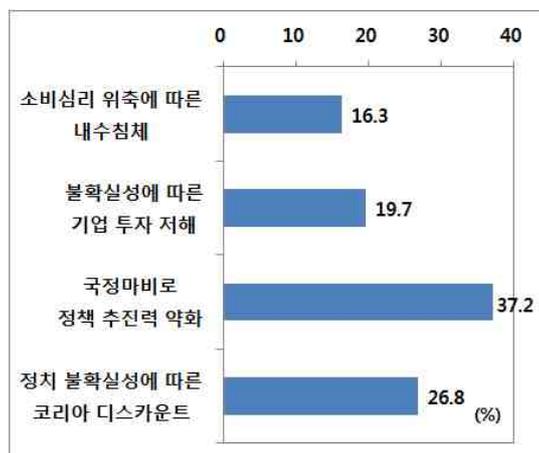
· “탄핵사태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정마비로 정책 추진력 약화'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7.2%로 가장 높음

·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층에서 '국정마비로 정책 추진력 약화'를 가장 우려

< 탄핵의 정치·사회적 비용 >



< 탄핵의 경제적 비용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② (정책 우선 순위)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으로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1~2순위로 응답

-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가 우선해야할 정책으로 국민통합, 양극화 해소, 정치개혁을 1~3순위로 응답

·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뒤편어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는 국민통합, 2순위는 양극화해소, 3순위는 정치개혁이라고 응답

- (응답자 특성별)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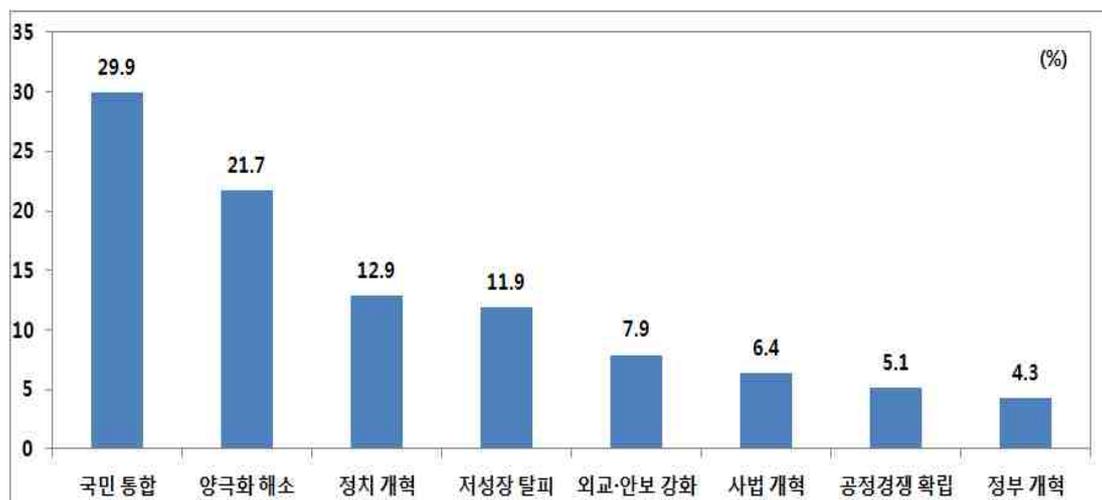
· 연령별로 봤을 때, 40대는 상대적으로 ‘저성장 탈피’에 대한 응답률이 16.9%로 평균(11.9%) 대비 높음

· 직업별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저성장 탈피’에 대한 응답률이 15.3%로 평균(11.9%) 대비 높음

·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13.9%로 평균(7.9%) 대비 높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응답층에서 1순위로 ‘국민 통합’, 2순위로 ‘양극화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순위로는 ‘정치 개혁’ 또는 ‘저성장 탈피’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 정책 우선 순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③ (경제 정책 우선 순위) 경제 정책에 한정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재벌 개혁을 1~2순위로 응답

- (전체)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가 우선해야할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창출, 재벌개혁을 1~2순위로 응답

·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뒤야할 경제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순위는 일자리 창출, 2순위는 재벌 개혁이라고 응답

- (응답자 특성별) 상대적으로 20대는 일자리 창출, 3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신성장동력 마련, 여성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평균 대비 높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응답률이 50.0%, 30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응답률이 10.7%로 평균 대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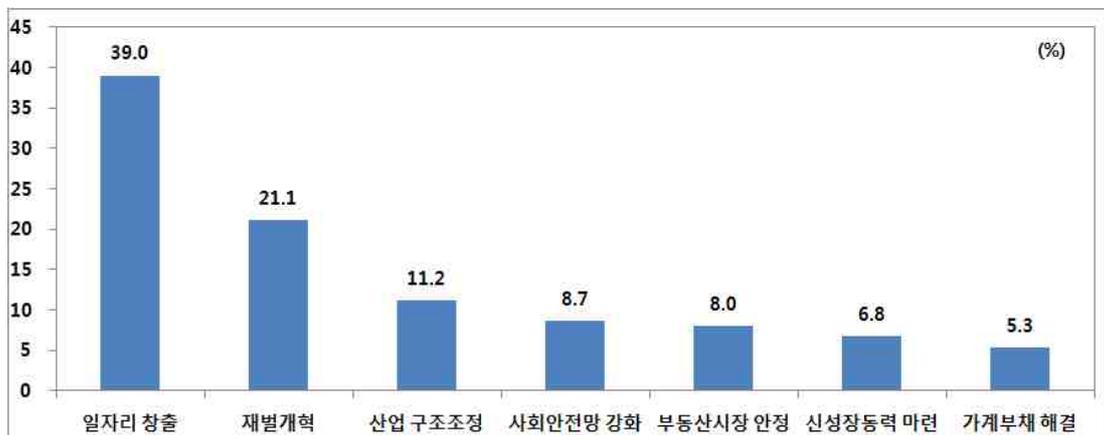
· 여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11.4%로 평균 대비 높음

· 자영업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응답률이 14.8%, 신성장동력 마련에 대한 응답률이 12.0%로 평균 대비 높음

· 보수층은 1순위가 ‘일자리 창출’(37.8%), 2순위가 ‘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마련’(각각 13.9%)이라고 응답

·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1순위로 ‘일자리 창출’, 2순위로 ‘재벌 개혁’을 우선해야 할 경제정책이라고 응답

< 경제 정책 우선 순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④ (일자리 정책) 응답자들은 공공보다는 국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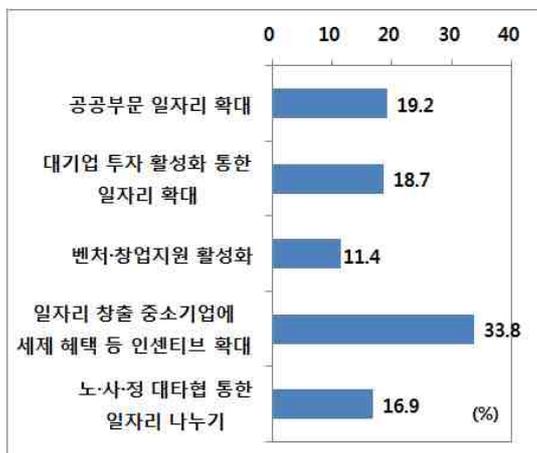
- (일자리 정책)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지지

- “임기 중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역점을 뒤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응답이 33.8%로 가장 높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의 26.2%, 비정규직의 27.1%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고 응답해 평균 (19.2%)대비 높았으나, 전반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응답이 1순위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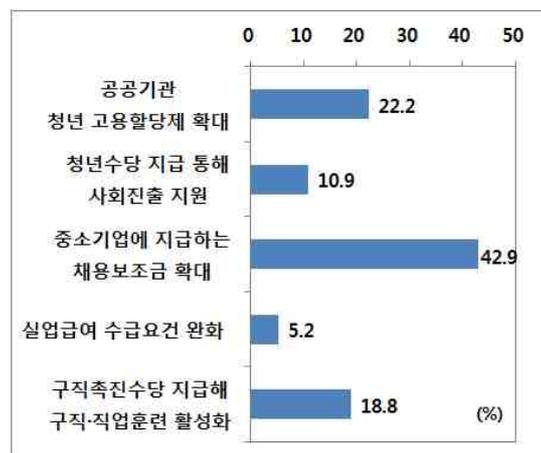
- (청년 일자리 정책)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를 가장 지지

- “임기 중 새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뒤야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에 대한 응답이 42.9%로 가장 높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20대는 '청년수당 지급 통해 사회진출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15.5%로 평균(10.9%) 대비 높았고, 비정규직은 '공공기관 청년 고용할당제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26.6%로 평균(22.2%) 대비 높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채용보조금 확대'에 대한 응답이 1순위

< 일자리 정책 >



< 청년 일자리 정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⑤ (4차 산업혁명 정책)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로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을 가장 지지

· “임기 중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뒀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응답이 41.8%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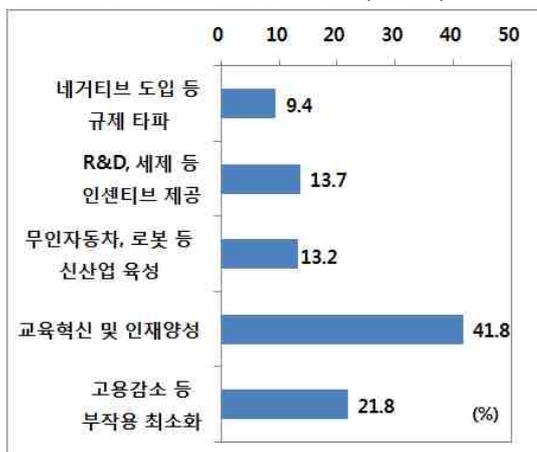
- (응답자특성별) 모든 응답 계층에서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을 1순위로 지정한 가운데 20대 및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뒤따르는 부작용 중 하나인 고용 감소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

· 연령별로 볼 때 20대는 상대적으로 '고용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응답률이 31.6%로 평균(21.8%) 대비 높았으며, 30대는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도입 등 규제 타파'에 대한 응답률이 12.3%로 평균 대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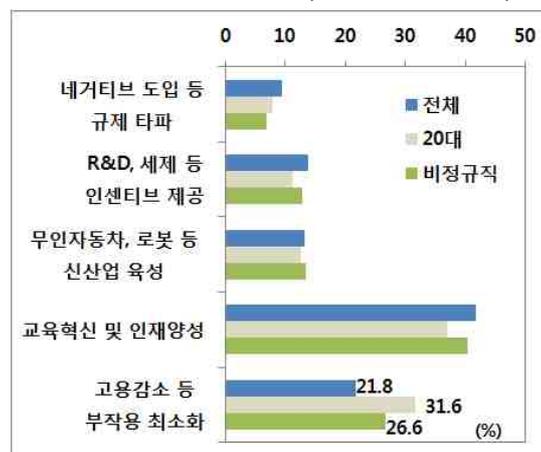
· 직업별로 볼 때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고용감소 등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응답률이 26.6%로 평균(21.8%) 대비 높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에 대한 응답이 1순위

< 4차 산업혁명 정책(전체) >



< 4차 산업혁명 정책(응답자특성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⑥ (사회·복지분야 정책) 응답자 전반적으로는 육아 복지 및 공교육 강화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별·직업별로 보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사회·복지 정책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

-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으로 '육아복지'와 '공교육 강화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

· “임기 중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어야 할 사회·복지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5.0%와 25.1%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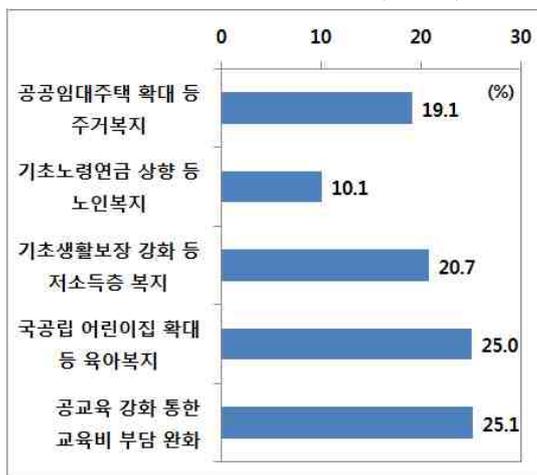
- (성별 및 이념성향별) 성별 및 이념성향별로는 응답자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가 25.3%로 1순위, 여성은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가 26.5%로 1순위였으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었음

·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중도·진보층에 관계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와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가 25% 내외로 1~2순위를 차지

· 즉, 성별 및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육아복지' 및 '공교육 강화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장 지지

< 사회·복지분야 정책(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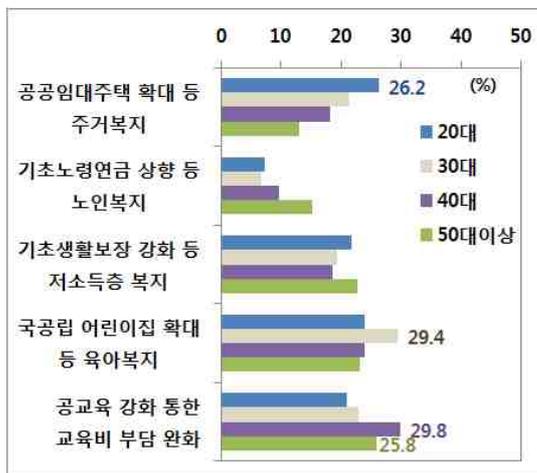
< 사회·복지분야 정책(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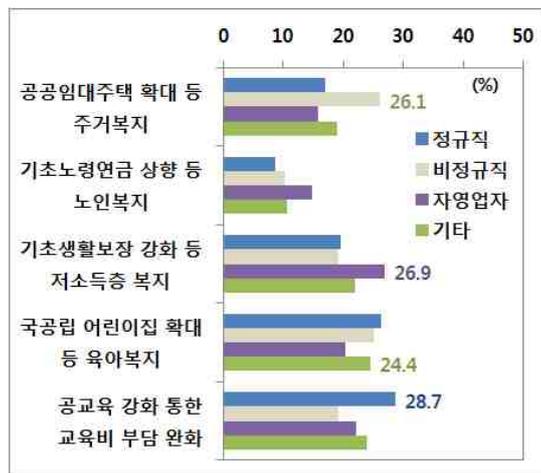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연령별) 20대는 '주거복지', 30대는 '육아복지', 40~50대는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별로 큰 차이
  - 20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26.2%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가 23.8%
  - 30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29.4%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가 23.8%
  -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29.8%와 25.8%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로 각각 23.8%와 23.2%를 차지
- (직업별) 정규직은 '교육비 부담 완화', 비정규직은 '주거복지', 자영업자는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1순위로 나타나 직업별로 차이
  - 정규직의 경우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응답률이 28.7%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가 26.2%
  - 비정규직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26.1%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육아복지'가 26.2%
  -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응답률이 26.9%로 1순위였으며, 2순위는 '공교육 강화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가 22.2%

< 사회·복지분야 정책(연령별) >



< 사회·복지분야 정책(직업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⑦ (정치 분야 정책) 응답자들이 새 정부의 정치 분야에서 바라는 1순위 정책은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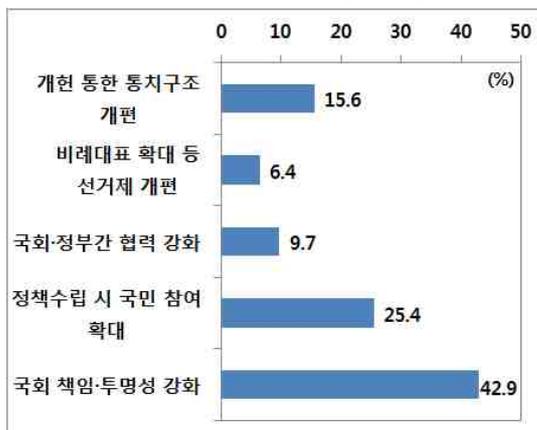
- (전체) 설문 응답자들은 새정부의 정치 분야 정책으로 '국회 책임·투명성 강화'를 가장 지지

· “임기 중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치분야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국회 책임·투명성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42.9%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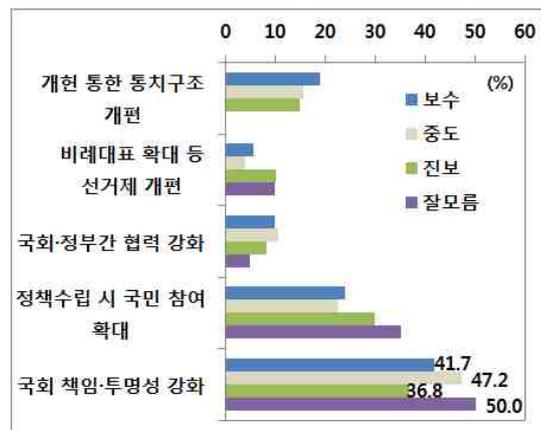
- (응답자특성별) 응답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응답계층에서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

· 20대와 진보층은 '정책 수립시 국민 참여 확대'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5.9%와 29.8%로 평균(25.4%) 대비 높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국회 책임·투명성 강화'에 대한 응답이 1순위

< 정치 분야 정책(전체) >



< 정치 분야 정책(이념성향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3. 시사점

-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첫째, 국민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 일련의 정치 이벤트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많이 표출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 중 하나로 지목
-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사안 중 1순위가 국민 통합이고 2순위가 양극화 해소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국민 의견을 수렴, 조율하고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둘째, 공공보다는 민간,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근본적으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셋째,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 저성장 장기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 빈곤 문제, 통일 및 국방비용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적극 전개하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
- 단순히 복지비를 지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데 유익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형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함

넷째, 무엇보다도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치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새 정부 출범의 시작이 탄핵 사건을 계기로 한 정치 분야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만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과제
- 이를 위해서는 1순위로 지적된 국회의 책임과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 국회와 정부간 적극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별첨]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비중	응답자 특성		비중
전체	1,004명	100%	지역별	서울	20.7
성별	남성	50.0		인천/경기	27.6
	여성	50.0		대전/충청/강원	13.4
연령별	20대	20.5		광주/전라/제주	11.5
	30대	25.1		부산/울산/경남	16.2
	40대	24.7		대구/경북	10.7
	50대	29.7		이념 성향	보수
가구주 직업별	정규직	48.6	중도		47.6
	비정규직	20.2	진보		32.5
	자영업자	10.8	잘모름		2.0
	기타	20.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